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2021.6.5.)

해설 : 이승철

* 16, 17, 20번 외에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됨.

0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해설

②③④는 정치·행정 2원론인 행정관리론과 관련된다. 행정관리론은 행정을 중립적·비권력적·관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절약과 능률을 중시했다.
• 정치·행정2원론

정치(의회)	정책결정, 국가의사의 결정	법 제정·정립	가치판단, 목표	권력현상	민주성·대응성·책임성 중시
행정	정책집행, 국가의사의 집행	법의 구체화·실행	사실판단, 수단	관리현상	능률성·전문성·기술성 중시

① 정치·행정 1원론인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 시장실패 이후 현대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된다.

• 행정국가화는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복잡화·다양화·전문화되는 것이며 행정국가화의 시작은 19C말 산업사회 등장부터이고 20C초에 확대된다.

⑦ 19C말 산업사회의 등장에 따른 도시화와 행정국가화에 따른 업관주의의 비능률을 극복하고 정치와 행정의 분리 및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을 강조한 것은 정치·행정2원론인 행정관리론

④ 20C초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큰정부의 등장과 현대행정국가시기에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것은 정치·행정1원론인 통치기능설
• 문제에서 시대 상황의 지정 없이 행정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20C초에 등장한 큰정부로서의 현대행정국가로 보면 된다.

✳ 행정관리론(정치·행정2원론)과 통치기능설(정치·행정1원론)

19C말 행정국가화	20C초 현대행정국가
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자본주의 발달) - 도시화와 도시문제의 증가에 따른 행정활동의 증가 -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 ② 업관주의의 폐해(비능률·비전문성, 정당의 사병화)에 대한 대응 - 실적주의 등장, 기계적 능률성 강조 - 행정관리론 대두(행정의 탈정치화)	①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 -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확대 - 1930년대 새로운 관리기법의 요구와 인간관계론 대두 ② 실적주의의 한계와 인사행정의 적극성 필요 ③ 사회적 능률성(민주성·인간성) 중시 ④ 통치기능설 대두(행정의 정치적 기능 인정)
↓	↓
1880년대 행정관리론(기술적 행정학) : 고전적 행정학	1930년대 통치기능설(기능적 행정학) : 신고전적 행정학
행정은 정치와는 다른 공공사무의 관리(경영성 강조)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경영과 유사(전문성 필요)	행정은 통치기능(정치성도 지님) 정책결정기능(정치기능) + 정책집행기능(행정기능)
정치·행정2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부인) / 공·사행정1원론	정치·행정1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강조) / 공·사행정2원론
기계적 능률성 , 가치중립성(사실판단 중시)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 인간성), 가치판단성
산업사회 등장과 19C말 행정국가화 업관주의의 폐해(비능률성) 극복 필요성	1930년대 시장실패(세계대공황)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현대행정국가)
배경	배경

답 ①

[관련기출]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행정사

- ①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②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 ③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④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답 ⑤

[관련기출] 정치·행정1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행정사

- ①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 ②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 ③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 ④ 디мок(M. E. Dimock), 애플비(P. H. Appleby)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 ⑤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답 ⑤

0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쟁적 정부 ② 노젓기 정부 ③ 성과 지향적 정부 ④ 미래 대비형 정부

해설

② (×)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 기능보다는 방향기(steering)를 강조하는 촉매적·촉진적 정부를 특징으로 함

■ 오스본과 게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1992)」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구분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정부역할	노젓기(rowing), 사공	⇒ 방향기(steering), 조타수	촉매적·촉진적 정부
정부활동	서비스 직접 제공(serving)	⇒ 지역사회 권한 부여(empowering)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공급 방식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monopoly)	⇒ 경쟁 도입(competition)	경쟁적 정부
	행정메커니즘(인위적 질서체제)	⇒ 시장메커니즘(자율적 질서체제)	시장지향적 정부
관리기제	규칙·규정 중심 관리(role-driven)	⇒ 임무·사명 중심 관리(mission-driven)	사명·임무중심 정부
관리방식	투입 중심 예산(budgeting-inputs)	⇒ 성과·결과 중심 예산(funding outcomes)	결과[성과]지향 정부
	지출 지향(spending)	⇒ 수익 창출(earning)	기업가적 정부
	사후 치료·치유(cure)	⇒ 예측·예방과 사전예방(prevention)	미래지향적·예방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명령·통제)(hierarchy)	⇒ 분권·참여·팀워크(participation/teamwork)	분권적 정부
주체·책임성	관료(행정)중심	⇒ 고객(국민)중심(customer driven)	고객지향 정부

답 ②

[관련기출] 기업가 정신과 기업경영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촉진적 정부 : 노젓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권한부여보다 서비스 제공
 ③ 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④ 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답 ②

[관련기출]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에 대한 가치와 정책접근요소가 아닌 것은?

2012 전원특채(하)

- ① 규칙중심보다는 시민중심의 정부를 강조한다. ② 정부는 방향잡기보다는 노젓기에 주력한다.
 ③ 사후치료보다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시민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대한다.

답 ②

[관련기출]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0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①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아주기' 보다 '노젓기'로 이해한다.
 ② 형평성, 민주성 보다 경제성,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③ 계층적 명령체제 보다 시장 기구를 중시한다.
 ④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한다.
 ⑤ 전통적 관료제 정부 보다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한다.

답 ①

0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해설

- ① (×)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② (×)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
 ③ (×) 차관은 정무직이다. 1~3급 실국장급은 계급·직급이 없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실장은 직무등급 가급, 국장은 직무등급 나급)되며 3급 과장급의 직급은 부이사관이며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다..
 ④ (○)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우리나라 공직분류 관련 주의사항

- ①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 / 헌법재판관은 정무직,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대법원장·대법관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법관으로서 특정직
- ② 중앙선거위 선거관리위원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시·도 선거위 상임위원은 일반직
- ③ 국회·헌법재판소·중앙선거위의 사무차장은 정무직,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 법원행정처의 처장(대법관)·차장(판사)은 특정직
- ④ 부·처·청의 장·차관·차장·차관보 비교

부	국가보훈처	처(국가보훈처 제외)	청	국가정보원	공직 분류
장관	장관			원장	장관급 - 정무직
차관	차관	처장	청장	차장	차관급 - 정무직
차관보		차장	차장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단,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인 별정직)

·단, 검찰총장·차장검사,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청장·차장은 특정직

- 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비교

구분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정무부단체장(지방공무원)	· 정무부시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	· 정무부지사·부시장 :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일반직)
행정부단체장(국가공무원)	· 행정부시장 : 정무직 국가공무원	· 행정부지사·부시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답 ④

[관련기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 국회8급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이다.
-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이다.

답 ③

[관련기출]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7 행정사

- ①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②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 ③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④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 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⑥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답 ②

0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설

- ①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적 지출대상별로 예산지출액을 결정해주므로, 재정적 한계를 지키기 쉽고, 행정부의 재량을 축소한다. 관료의 재량을 줄임으로써 부정과 예산의 남용을 방지한다.
- ② (O)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예산액 산정 : 예산액 = 업무량 × 단위원가
- ③ (O)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계획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④ (O)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서 탈피하여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B·C분석, E·C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제도이다.

답 ①

[관련기출]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
-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답 ①

[관련기출]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9급(1)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답 ②

[관련기출]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09 지방9급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④

05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 ②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 ③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 ④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 ③ (×)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① 특정사업 운영, ② 특정자금의 보유·운용, ③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	
자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을 재원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정부출연금·민간임의출연금·외부차입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
	무상급부 원칙 - 일반보상	유상급부(배제성) - 개별보상 가능	
수립 및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일성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통일성 원칙의 예외)	
완전성	정부 예산		예산 외로 운영(완전성의 예외)
집행상 재량성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특별회계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큼)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이용(국회의결 필요), 전용 국가재정법정 사유에 해당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이하의 변경안은 국회 제출 불필요
결 산	감사원의 결산 검사,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답 ③

[관련기출] 예산 외 공공재원인 기금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4 국가7급

-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는 점은 특별회계와 공통적이다.
-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해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이 높다.

답 ①

[관련기출] 다음 중 예산과 기금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2005 경기9급(2)

- ①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수입원이 다양하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 ③ 예산은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하지만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
- ④ 기금운용계획은 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답 ④

06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 ① (○) 정부재정지표 상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②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한 국가의 일방적·획일적 지시가 가능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된다. 지방의 여건과 주민의 선호도에 따른 사업보다는 중앙부처의 의도에 의해 사업이 선정되고 관리된다.
- ③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할 수 있다.
- ④ (○)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답 ②

[관련기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7급(상)

-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답 ③

[관련기출] 국고보조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해경간부

- 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④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무와 기능을 위탁할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 ④ 지방채의 차환

답 ③

07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 ②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 ③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 ④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해설

①②④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베스와 아볼리오(B. Bass & B. Avolio, 1993)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4I's)

이상화된 영향력 = 카리스마적 리더십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 구성원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 획득. 구성원들은 리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함.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disenchantment)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줌(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영감적 리더십	부하가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 안전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아닌 자아실현·존중감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며 부하 개인의 이해를 넘어 조직 차원의 큰 목표에 관심을 갖도록 함.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킴. 부하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자극하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개인적 배려 (individual consideration)	부하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면서 부하 개개인의 발전 및 성장에 대한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	
--------------------------------------	---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구 분	거래적(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변혁적(전환적·전변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화관	안정 지향·현상유지 - 소극적, 회피적, 폐쇄적	변화 지향 - 적극적, 창조적, 개방적
시간관	단기적, 현실 중시	장기적, 미래지향적
이 념	능률지향 - 단기적인 효율성과 타산	적응지향 - 장기적인 효과와 가치의 창조
권력 원천	지위로부터 얻음	구성원들이 부여함
관리계층	주로 하위관리층, 중간관리층	주로 최고관리층(단 최고관리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 간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 통제 지향 즉시적·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 하급욕구 충족 리더 - 추종자 간 상호독립적	영감과 비전제시에 의한 내적 동기유발, 비전 지향 높은 수준의 장기적인 개인목표(자아실현)를 동경하도록 동기부여 고급욕구 충족. 리더 - 추종자간 상호의존적
과업	일상적	비일상적
행위표준	부하들이 규칙과 절차에 따르기를 원함	변환적이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부하를 격려
문제해결	부하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줌	질문을 하여 부하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함
의사소통	하향적, 수직적	다방향적
수용기제	일방적 지시	합리적 설명
조직구조	기술구조(기술위주)나 기계적 관료제에 적합	경계작용적 구조(환경과 연계작용), 탈관료제 조직, 단순구조, 임시조직 등에 적합

답 ③

[관련기출]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2005 국회8급

- ①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다.
-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적이며 부하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경우 민주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 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합리적 교환관계를 설정하여 심리적으로 추종자와 일체가 되고, 신뢰를 구축한다.

답 ③

[관련기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행정사

- ① 변화를 지향하고 체제개방적이다.
- ② 영감과 비전 제시, 공유에 의한 동기유발을 중시한다.
- ③ 기계적 관료제 구조보다는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 ④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⑤ 리더의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지적 자극, 인간적인 관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다.

답 ④

0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 ② 굴릭(Gulick)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 ④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해설

- ② (×) 테일러(F. Taylor)는 시간-동작 연구(time & motion study)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 ③ (×)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 ④ (×) 조직이론(원리접근법)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제시했다.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조직원리론을 비판하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조직구조 형성방식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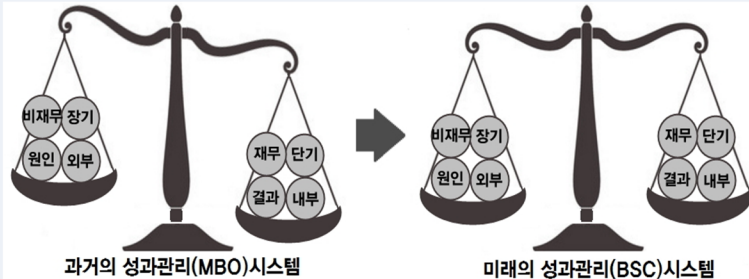
0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 ②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③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④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해설

- ① (○) BSC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4개 관점별로 전략목표, 성과지표, 목표값과 실행계획으로 연계시킨 전략관리시스템이다. 전통적 재무회계 모형은 과거의 정보에 의존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했지만 BSC에서는 장단기 목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단기적 성과에 추가하여 조직의 본질가치와 성장 동력과 같은 장기적 성과지표도 중시..
 ②③ (○) 무형자산의 가치가 재무성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내지 전략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고객, 내부업무처리, 학습·성장관점)의 균형을 꾀한다.



- ④ (×) 정책순응도만 고객 관점 측정지표이다. 시민참여, 적법절차, (관련 정보의) 공개는 내부프로세스 관점 측정지표이며, 내부직원의 (직무)만족도는 학습·성장 관점 측정지표이다.

BSC 각 관점별 측정지표(성과지표)

4대 관점	측정 지표
재무 관점	순이익, 매출액, 자본수익률, 수치차(收支差: 예산 대비 차이), 재정건전성 등(정부조직의 경우 순이익, 매출액 등의 지표는 사용하기 곤란하고 사업 집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효용]이 적용될 수 있음)
고객 관점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감,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정책순응도, 민원인 불만을, 삶의 질에 대한 통계지표 등.
내부프로세스 관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시민의 참여 보장, 적법절차 준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관련 정보의 공개, 정책수단의 적실성, 서비스전달시스템의 효율성.
학습과 성장 관점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지식의 창조·관리,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정도, 지속적인 자기혁신·성장, 내부 제안 건수, 학습동아리(스터디그룹) 수.

답 ④

[관련기출]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가 틀린 것은?

2014 지방9급

-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을,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제안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답 ③

[관련기출]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

-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계를 가진다.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④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답 ②

[관련기출]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고객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 수가 있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답 ④

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②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③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해설

① (○) **외적 조건(external factor)** : 옹호연합의 형성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외적 변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	역동적인 외부 사건(external events)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자연자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조, 기본적인 법적 구조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과 영향
10년 이상 안정적이고 잘 변화되지 않으며 변화가 있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음.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져 정책하위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침.

② (×) **정책지향학습(Policy - Oriented Learning)**

- ① 정책지향학습은 경험과 새로운 정보 획득에서 도출된 결과 및 정책목표 수정이나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행동과 사고에 대한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의 수정을 의미함.
- ④ 신념체계의 수정은 주로 도구적 측면에 집중되며, **학습을 통해 규범적 핵심신념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움**. 정책핵심을 변화시키려면 10년 이상의 장기기간에 걸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며 정책지향학습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함. 정책지향학습을 유도하는 조건으로 옹호연합 간에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존재하며, 논쟁을 촉진하는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포럼이 있어야 함.

• **계층적 신념체계(belief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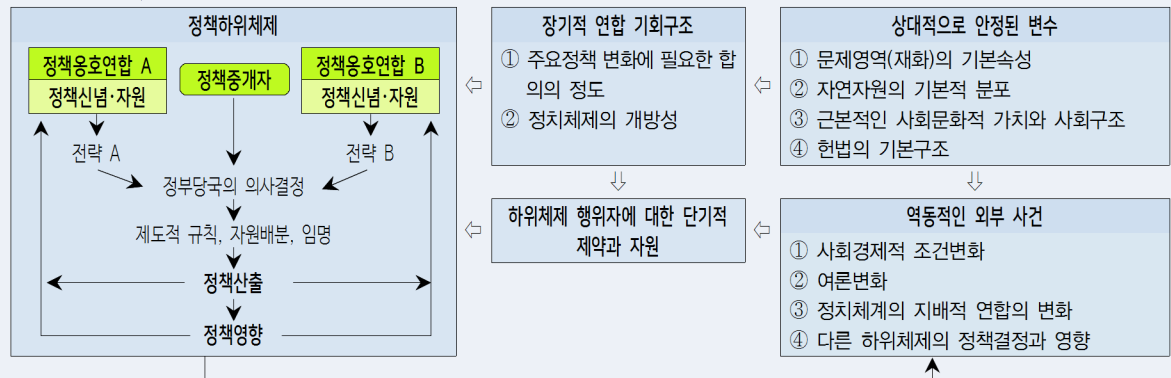
규범적 핵심 신념 (normative core beliefs)	옹호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으로 인간 본성, 자유·평등·발전·보존 등 존재론적 공리가치(근본가치)의 우선순위, 정부와 시장의 역할 등과 관련됨. 특정 정책과의 연관성은 약함.	변경가능성은 종교의 개종처럼 희박함
정책핵심신념 (policy core beliefs)	규범적 핵심 신념의 달성을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사상. 특정 하위체제에서 실제 운용되는 정책과 연관. 정책과 관련되어 특정 목표가 어떤 것인지 혹은 목표달성의 필수조건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인과적 인식.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심각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변할 수 있음
2차적 신념 (secondary aspects beliefs) 도구적 측면의 신념 (instrumental aspects beliefs)	정책핵심 신념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상·입법상의 정책수단(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 해석 등) 결정이나 정보탐색과 관련. 2차적 신념의 서로 상반된 정책대안들은 정책중개자에 의해 중재됨. 특정한 세부적 정책에만 국한되며 가장 구체적이며 변화가능성이 다분	가장 쉽게 변할 수 있으며 상대 옹호연합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으로 나타남

③ (○)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 ① 옹호연합들은 자신의 신념과 전략을 정책에 투영시키기 위하여 다른 옹호연합 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책중개자에 의해 조정됨.
- ④ 정책중개자는 옹호연합들의 주장을 규범적으로 중재하고, 옹호연합 간 첨예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제3의 행위자나 정책참여자로서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체계 안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
- ⑤ 정책중개자는 정책결정권을 지닌 의회, 관련부처, 공무원, 법원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으며 갈등 당사자를 소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적극적인 조율·개입도 가능.

④ (○)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 정책지지연합)**

- ①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는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의 신념체계를 통해 그 정책을 지각하며 자신과 같은 신념을 지닌 다른 행위자들과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그들의 신념을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④ 옹호연합의 결속력 강화 요인으로 신념체계가 작용하며 옹호연합 내 구성원 또는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옹호연합들의 중심 고리가 됨. 정책하위체제에는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옹호연합이 존재하며, 각 집단은 정치인, 집행관료, 이익집단의 지도자, 전문가 등 공·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됨.
- ⑤ 옹호연합은 공통의 신념체계를 가지며 보유한 자원과 신념을 기초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 ⑥ 신념체계에 의해 형성된 옹호연합들은 안정적인 내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로 인해 지원 또는 제약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그들의 전략과 자원을 지니며 다른 옹호연합과 갈등과 경쟁을 보임.
- ⑦ 옹호연합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변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략과 자원뿐 아니라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에 의한 합의, 내부적·외부적 충격 등이 있음.



답 ②

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 ②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 ③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 ④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해설

- ① (×) 업관주의는 정치성·당파성·충성심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 ② (×) 업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당과 정당지도자에게 관료의 임면(任免)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executive leadership)을 강화한다.
- ③ (×) 실력주의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요구로 인해 관료의 특권화와 관료침체를 초래하고 관료조직이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폐쇄집단화를 초래하므로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은 낮아진다.

4

1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②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③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④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해설

- ① (○)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예외적으로 역량평가 없이 임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 ② (×)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과 직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을 적용한다. 신분(계급)보다 일(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 ③ (○)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계약등의 평가, 직무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된다.
- ④ (○)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30%는 공무직위로서 타 부처에 개방, 20%는 개방형직위로서 민간에게도 개방, 50%는 부처자용직위로서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타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제청 가능(개방형과 공무직위는 경쟁방식 임용).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인사운영 기준	계급제(사람에게 부여되는 계급을 기준으로 인사운영)	직무등급제(직무의 난이도·중요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인사운영)
충원·보직 이동	부처 내 폐쇄적 임용	부처 내·외 개방적 임용, 경쟁
성과관리	연공서열 위주의 형식적 관리	엄격한 성과관리 - 직무성과계약제
보수	계급제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자질·능력 평가	주관적·추상적 평가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획일적 교육	개별적·맞춤식 교육
검증	인사심사	인사심사 + 적격성 심사
신분관리	안정적 신분보장	엄격한 인사관리, 적격심사를 통한 인사조치

②

[관련기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 경찰간부

-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수도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사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기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 국회9급

- ① 과거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 ②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위직 국가공무원이 포함된다.
- ③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적용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신분증시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 ⑤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

④

1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②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 ③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설

- ② (×) 대량생산 및 규모의 경제는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 ③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활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물들의 사용 패턴이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들이 다른 사물들에 공유된다. 이를 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 스마트시티이다. 도시의 구축구축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개념이며 도시 곳곳의 정보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4차산업혁명

1. 의의

- ①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 ; Cyber-Physical Systems) 등 핵심기술이 상용화에 의한 '초연결형·초지능형 자동화시대'로의 사회변혁
- ② 클라우스 슈바브(K. Schwab)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
- ③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 구축.

■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생산체제 도입을 의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집된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빅데이터 분석)하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핵심으로 함.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혁신기제	동력혁명	분업화된 자동화 혁명(대량생산)	지식·정보 혁명	초연결성·초지능성·초예측성 혁명
특성	offline 혁명(인간의 신체능력 증강)		online 혁명	O2O(online 2 offline), CPS(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기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모바일, 융합현실, 5G 통신, 로봇공학, 3D프린팅
정부			정부 1.0~3.0	정부 4.0

■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세계(현실)와 가상세계의 융합(O2O : online 2 offline). 그 동안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으로 구분되어 발전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과 시스템이 결합해 불연속성을 극복. 예)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를 이용한 mobile healthcare. 융합현실(Mixed Reality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등.

2. 특징

- 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 사물인터넷(IoT)의 진화와 만물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람과 사물, 공간, 시스템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초연결되어 상호의존도가 증폭됨.
- ②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super intelligence) : 초연결성에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하여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인간과 생물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인간 수준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지능을 갖게 됨(예)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정보가 클라우드와의 접촉을 통해 하드웨어 자체가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물리적 세계의 객체들이 초지능성을 갖게 됨.
- ③ 초예측성 :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간 행동을 예측. 딥러닝과 같은 첨단 AI는 스스로 빅데이터의 특징량을 추출해 의미 있는 판단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④ 기타 : 초신리혁명(예) 블록체인, 암호화폐), 초생명혁명(예)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1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 ㉡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

④ ㉡, ㉢

해설

- ㉠ (×)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 (×)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객관적·외재적 책임보다는 내부통제와 내재적 책임을 중시했다.

■ 파이너(H. Finer)와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행정책임 논쟁

구분	H. Finer의 외재적 책임론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	C. Friedrich의 내재적 책임론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시대	근대입법국가를 대변하는 고전적 입장. 정치행정2원론 관련	행정의 자량권을 중시하는 현대행정국가. 정치행정1원론 관련
접근 차원	조직 차원 접근(조직 차원의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공무원 개인 차원 접근(개인차원의 자율적 책임)
내용	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개인이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비제도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통제를 가해야 함	책임 있는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 개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
특징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제재)에 의한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중시(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정책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	내부통제와 내재적 책임 중시(관료개인의 주관적·자율적 책임이 중요) ① 기능적 책임 : 공무원의 직업윤리나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른 책임. ② 정치적 책임 : 국민의 요구, 즉 민중감정(public sentiment ; 국민정서)에 응답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책임.
특징	3권 분립적, 법적, 정치적 제도적, 객관적, 외재적, 공식적, 소극적, 타율적, 가치중립적, 전통적, 간접적(의회에 대한 책임)	전문직업적, 자량적, 기능적, 비제도적, 주관적, 내재적, 비공식적, 적극적, 자율적, 가치지향적, 현대적, 직접적(민중에 대한 책임)

답 ①

[관련기출]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12. 군무원

- ① 책임성은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된다.
- ② 롬제크(B. Romzek)와 듀브닉(M. Dubnick)에 따르면 강조되는 행정의 책임성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③ 파이너(H. Finer)는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성을 강조했고,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체계적 성과측정을 중시한다.

7/3

[관련기출]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2020 지방9급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1735 ①

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②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④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설

- ① (○)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는 국가경찰제의 특징이다. 자치경찰제는 전국적·광역적·통일적 경찰활동에는 부적합하며 경찰조직의 이중적 운영에 따른 경찰활동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구분	국가경찰제(유럽대륙형)	자치경찰제(영미형)
의의	국가가 설립·조직·관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찰 형태. 대륙법계의 국가(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단일명령체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조직·관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찰 형태. 영미법계 국가(주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 주민자치사상)
수단	권력적 명령·강제가 주된 수단	권력적 명령·강제보다는 비권력적 수단 중시
장점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보다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에 유리 ② 조직의 통일적 운영(명령계통 일원성, 통일적 지휘체계) ③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④ 타 행정부문의 긴밀한 협조·조정 원활 ⑤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⑥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개혁 용이 ②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고 인권·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움. 경찰과 시민의 유대 강화 ③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지역별 특수성 고려) ④ 자원과 책임의 분담 ⑤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서 경찰권행사가 정권유지수단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단점	① 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② 경찰조직이 비대화·관료화·정치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 약화 ③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 저해,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 곤란	①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곤란하고, 전국적인 기동성 약화와 조직체계의 무질서화 초래. 일반행정예의 예측. ② 전국적·광역적·통일적 경찰활동에 부적합, 전문성의 약화 ③ 자치단체의 재정 차이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등 ④ 타 경찰기관과 및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응원체제 곤란 ⑤ 조직·광역·국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곤란 ⑥ 지방세력가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경찰부패(지역정치화 우려)

- ③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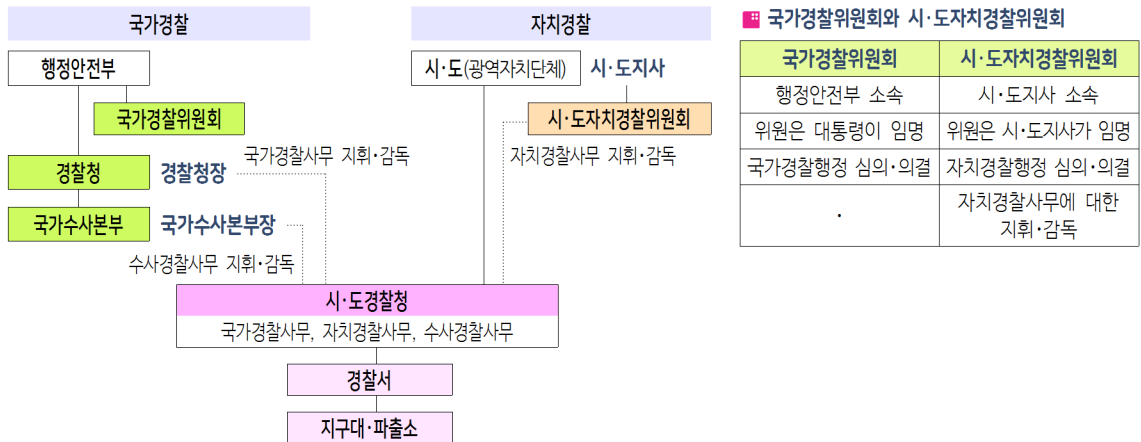
- 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둔. 단장은 도지사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개방형 임용도 가능)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는 폐지됨.
- ② **자치경찰사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 ④ (○) 중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1.1.1.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전국 경찰제도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을 거쳐 거쳐 2021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는 계속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아래 추가한 자료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②

☞ 우리나라경찰제도 : 절충형 -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 시행)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



2. 지휘·감독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 단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사무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수사경찰 지휘·감독
정보·보안·외사·경비, 112상황실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	범죄 수사

※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 가능.

3. 자치경찰의 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

법률 제3조의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수사사무 일부(지역밀착형 수사업무) :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역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43조 3항).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9 서울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답 ③

17 엘리스(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 ② 쓰레기통 모형 ③ 조직과정 모형 ④ 관료정치 모형

해설

엘리스는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설치)에 대한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쿠바해안봉쇄정책 결정과정분석하여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적용해 해상봉쇄(blockade) 대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제시된 내용은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 제시된 지문의 분석

- ①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 ⇨ 개별적 행위자
 ②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 없음 ⇨ 합리적 행위자 모형 아님
 ③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 ⇨ SOP에 의한 결정이 아니므로 조직과정모형이 아님. 정책이 참여자 간 타협·충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관료정치모형.

구 분	Model I. 합리적 행위자 모형	Model II. 조직과정모형	Model III. 관료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잘 정비된 명령·복종 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半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상호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
정책결정 양태	최고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동시적·분석적 해결)	준해결, SOP에 의한 관습적 결정(순차적 해결)	정치적 결정(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협상·연합·충정)

■ 엘리스(Allison)모형의 Model III :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 또는 정부 내 정치모형

- 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극도로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이며 조직은 상호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응집성이 매우 낮음. 행위자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며, 정책결정의 권력은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함.
 ② 정책이란 참여자 간 타협·충정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됨. 즉, 정책은 참여자 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른 타협·협상의 산물
 ③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체조직의 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가 혼재하므로 목표의 공유도 및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약함. 각 행위자는 국가 전체의 총체적 정책분석보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④ 행위자들의 목표와 관점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 경쟁·협상·타협 등 정치게임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행동경로가 존재(정치적 협상은 제도화된 통로에서 이뤄지는데 제도화된 통로는 정부가 특정 쟁점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규칙적 수단을 의미함). 정책은 정치적 게임의 결과이므로 각 참여자가 당초 의도했던 것과 많이 달라질 수 있음.
 ⑤ 개인의 정치적 능력이나 자원이 중시되는 조직의 상층부에 주로 적용.
 ⑥ 쓰레기통모형과의 비교 : 정책은 조직의 응집력이 약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쓰레기통모형과 유사. 단 관료정치모형은 각 개인의 이익추구가 명백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만 쓰레기통모형은 각 개인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름.

답 ④

[관련기출]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선관위9급

- ①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거의 없다.
 ②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의 하위조직들로 본다.
 ③ 정책결정의 방식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경쟁, 지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정책목표의 공유도는 매우 약하다.

답 ②

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해설

- ① (○) 제도에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 제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
- ②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띠며, 미래의 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하게 되며, 그 결과 한 국가 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 ③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consequentiality) 논리보다는 적절성(appropriateness) 논리를 중시한다.**
- ④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존이다(개인적 합리성 추구).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지만, 각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제어하는 공식적 게임의 규칙(제도)을 사람들이 스스로 형성하며 게임의 규칙은 상호작용의 순서, 대안선택, 정보, 보수 등에 영향을 미쳐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개인의 합리성을 집합적 차원의 합리성으로 연결하여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 따라서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하게 된다.

답 ③

19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 ① 검사요인 ② 선발요인 ③ 상실요인 ④ 역사요인

해설

사전측정의 영향이 사후측정에 미치는 것으로 검사(측정)요인에 대한 것이다.

■ 검사(측정·조사·시험)요인(testing)

검사(측정)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대상집단이 유사한 사전검사를 경험한 경우, 사전검사(pre-test)가 시험의 친숙도를 증가시켜 사후검사의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자동차 운전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습 실시 후 그 효과를 평가한 경우 처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것 자체에서 학습이 발생하여 교습효과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측정대상자들이 측정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적 행위나 무의식적 반응이 수반되어 엄밀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도 측정요인으로 봄. 측정경험이 축적되어 처치 후의 동일한 측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될 경우 대상자들이 문제를 기억하거나 프로그램 집행 후의 시험에 앞서 이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시험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

답 ①

[관련기출]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의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6 국가7급

- ㉠ 실험(testing)효과 ㉡ 회귀(regression)효과 ㉢ 성숙(maturation)효과 ㉣ 역사(history)효과

- ㉠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험에 친숙도가 높아져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특정 프로그램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나타난 효과
 ㉣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되는 경향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②

[관련기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 국가7급

- ①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답 ②

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②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③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④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제시된 방식은 모두 미국의 다양한 지방정부 기관구성 방식들이다.

- ① (○) **강시장-의회형** :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지위를 가진다. 시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형태이다.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 거부권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지방단위에서 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며, 의회는 법안의 제정, 예산안 의결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 **위원회형** : 주민이 선출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위원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해 정책결정을 함과 동시에 담당 전문기능 분야를 갖고 각 집행부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 위원 중 한명이 자치단체장 직무를 담당하나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다.
- ③ (○) **약시장-의회형** : 시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시장이 의회의장을 겸하는 기관협조형 기관구성 형태이다. 시장은 의회의장 기능과 명목상의 시 대표기능을 갖고 제한된 거부권과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시의 예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 역할을 한다.
- ④ (×) 의회-시지배인형태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시지배인형 :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고 시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으며 의회에서 행정전문가로서 시지배인(책임행정관)을 임명하여 집행권을 담당하게 한다. 의회는 행정운영을 총괄하며, 시지배인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책임지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지배인은 예산편성권, 의회에 대한 권고권, 행정부서장에 대한 임명, 파면 등의 권한을 갖는등 실제적인 행정의 총 책임자이다. 시장은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들 가운데 선출(윤번제로 운영되거나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의원)되며, 어떤 경우든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의회-시지배인형은 형식상 기관대립형이므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정치적으로 선출되는 시장 대신 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임명하여 시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지만, 주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에게 막중한 권한을 집중시켜 독선화의 우려가 있다.

답 ④